

루리 위키 > 가이드 · 고민 해결

홈 > 고민 해결

루리의 줍줍 · 응모·실무 가이드

출산율 전망과 실제의 차이가 말해 주는 것

루리의 줍줍이 정리한 글



출산율 전망과 실제의 차이가 말해 주는 것

루리

2023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가 2025년 합계출산율 저점을 0.65명으로 내다봤으나 실제로는 0.80명이었다. 전망이 빗나갔다는 사실은 안도의 근거이기보다, 출산 추세를 읽는 방법과 정책 평가의 기준을 다시 점검하라는 신호다.

2023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가 2025년 합계출산율 저점을 0.65명으로 내다봤으나 실제로는 0.80명이었다. 전망이 빗나갔다는 사실은 안도의 근거이기보다, 출산 추세를 읽는 방법과 정책 평가의 기준을 다시 점검하라는 신호다.

이 글은 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한 논설이다. 반등의 지속 여부와 원인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1 1. 주장

실제 출산율이 전망보다 높게 나왔다고 해서 저출산 문제가 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반등을 "일시적 착시"로 일축할 수도 없다. 전망과 실제의 차이는 두 가지를 알려 준다. 하나는 인구 전망이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가정의 집합이라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정책이든 인구 구조든 어떤 요인이 반등에 기여했는지를 검증하지 않으면 다음 정책도 감으로 설계된다는 사실이다.

2 2. 근거

2-1. 공식 숫자로 본 전망과 실제

통계청은 2023년 12월 14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에서 중위 추계 기준 합계출산율이 2022년 0.78명이고 2025년 0.65명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았다. 2072년에는 저위 0.82명, 중위 1.08명, 고위 1.34명이라는 가정도 제시했다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605259>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605259>)).

실제 값은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가 2026년 8월 26일 발표한 2025년 출생통계(확정)에 담겼다. 출생아 수는 25만 4,300명으로 전년보다 1만 6,000명(6.7%) 늘었고,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전년보다 0.05명 올랐다(<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5815>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5815>)). e-나라지표에도 2025년 0.80명, 2024년 0.75명으로 게시되어 있다(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11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11)). 2025년 기준으로 전망 중위값 0.65명과 실제 0.80명의 차이는 0.15명이다.

2-2. 차이가 말해 주는 첫째: 전망은 가정이다

장래인구추계는 현재 추세와 합리적 가정을 이어 붙인 시나리오다. 중위·저위·고위로 폭을 둔 이유도 불확실성 때문이다. 2025년 실제값이 중위 추계의 저점보다 높았다는 사실은, 가정이 틀렸다는 단순 판정이 아니라 가정을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폭을 열어 두어야 한다는 증거다. 한편 UN의 세계인구전망(WPP) 등 국제 기관의 한국 전망치는 이 글에서 직접 확인한 공식 값이 없으므로 수치를 인용하지 않으며, 공식 확인이 필요하다.

2-3. 차이가 말해 주는 둘째: 반등의 원인은 아직 규명 중이다

출생아 증가가 정책 효과인지, 혼인 증가나 특정 연령층 인구 구조의 영향인지는 이 글이 확인한 공식 자료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 국가데이터처 자료에는 35세 이상 산모 비중이 37.3%로 1.4%포인트 올랐다는 내용이 있어(위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게시 자료) 출산 연령 상승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반등이 있었다는 것과 원인이 해명되었다는 것은 별개다.

3. 반론과 재반박

반론 1. 반등이 확인됐으니 저출산 정책이 효과를 거둔 것 아닌가. 합계출산율이 올랐으니 정책을 유지·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반박. 효과를 주장하려면 정책 대상자와 비대상자의 출산 행태를 비교한 분석이 필요하다. 전체 합계출산율의 상승만으로는 정책 덕인지 구조적 요인인지 구분되지 않는다. 정책을 확대하는 것도, 폐기하는 것도 그 분석 이후에 해야 한다.

반론 2. 0.80명은 여전히 극히 낮으므로 반등은 의미가 없다. 인구 유지에 필요한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재반박. 수준이 낮다는 지적은 옳으나, 추세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사실까지 무시하면 대응이 경직된다. 하락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제로 짠 재정·교육·돌봄 계획과 반등을 전제로 한 계획은 크게 다르다. 방향 전환은 계획의 가정을 바꿀 충분한 이유다.

반론 3. 일시적 반등이니 곧 되돌아갈 것이다. 단기 변동에 의미를 두지 말자는 주장이다.

재반박. 이 주장도 현재로서는 확정적 근거가 없다. 이 글이 확인한 공식 자료에는 이후 수년의 값이 없으므로, 반등의 지속·소멸을 단정하는 쪽 모두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4 4. 결론

전망과 실제의 차이 0.15명은 낙관의 근거도 비관의 근거도 아니다. 인구 전망이 가정에 의존한다는 점, 그리고 정책 평가가 아직 충분히 정교하지 않다는 점을 드러낸 숫자다. 따라서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인구 전망은 단일값이 아니라 범위와 가정을 함께 공개하고 갱신 주기를 짧게 한다. 둘째, 출산 지원 정책은 대상자·비대상자를 비교하는 사후 평가를 제도화한다. 셋째, 반등을 이유로 한 정책 후퇴나 하락을 전제로 한 과잉 대응 모두를 피하고, 공식 통계가 쌓일 때까지 가정을 열어 둔다. 출산율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통계로 다뤄야 한다.

5 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브리핑(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605259>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605259>)
- 국가데이터처, 2025년 출생통계(확정) 자료(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게시):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5815>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5815>)
- 국가데이터처 e-나라지표, 출생 사망 추이: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1011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1011)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링크 복사

네이버 블로그

밴드

X

Facebook



다른 고민 보기 · 루리에게 추천 상담 받기

6 마감 임박 공모전

출처: 루리의 줌줌(sungprofile.cloud) · 최신 내용은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